



100도 돌파… 펄펄 끓는 광주 사랑의 온도

29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4년만에 100도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희망 2012 나눔캠페인'은 이날 목표액인 22억원을 넘어선 22억3600만원이 모이면서 101.6도를 기록중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5% 증가한 수치다. 한편 전남 '시령의 온도탑'은 이날 현재 95.7도로 목표액인 58억원에 3억9000만원 부족한 상황이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살인으로 끝난 부부싸움

아내 살해 50대 광주 서부경찰에 자수

광주서부경찰은 29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김모(5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박모(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식당

을 개업한 아내와 금전 문제로 심하게 다했으며 이날도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찔렀다"고 자수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50대 5·18국가유공자

허위 보험금 수령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29일 수십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5·18국가유공자 김모(5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청하고 아내(48)와 두딸(25·23)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9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 2009년부터 관절염, 위궤양, 생리통, 고혈압 등으로 867일간 입원해 보험금 2억5000만원 상당을 부당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기성회비 파문' 전남대 초비상

법원 반환 판결에 지역 국공립대도 촉각

판결대로라면 학생들에 40억 돌려줘야 할 판

등록금의 80%…전액 반환 소송때 감당 못해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 요인으로 지목돼온 국·공립대의 기성회비(期成會費)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광주·전남지역 국공립대를 최근 10년 내(소멸시효) 졸업한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전남대, 목포대 등 주요 국·공립대학은 기성회비 반환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등록금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면 재정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전남대 424명을 비롯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비를 상대로 내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거나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 40개 국립대가 2002~2010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2조8172억 원을 교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

▲기성회비= 학교 시설 확충 등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제정된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성회비는 사업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으나, 국·공립대에서는 존치돼왔다. 2009년 기준으로 국·공립대는 전체 등록금의 86.9%를 기성회비로 충당했다.

실이 드러난 데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학교별 규모는 서울대 4308억 원, 부산대 265억원, 경북대 2001억 원, 전남대 1644억원, 강원대 1469억 원 등이다.

광주·전남 국공립 대학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재정이 심각한 타격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의 일부인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지만, 전액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반환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산술적으로 전남대 연평균 졸업생이 4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한 해 졸업생 반환금만 4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반환소송 청구 시효 10년내 재학생을 4만명으로 잡으면 40억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이 제기될 경우다. 전남대는 지난해만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432만2100원 가운데 349만7000원(80%)을 기성회비 명목으로 거둬들여 한 해에 무려 140여억원을 학생에 돌려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광주교대 등 주요 국·공립 대학도 마찬가지다.

전남대의 한 관계자는 "국·공립 대학총장협의회에서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정부의 국공립 대학에 대한 특단의 재정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복지 등 현안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폭행"

학부모, 남부경찰에 고소장

광주 남부경찰은 29일 지난해 12월 27일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박모(여·22)씨가 A(4)군을 때렸다고 A군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의 어머니는 고소장에 "어린이집 교사 박씨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코를 잡아당겼으며 한쪽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다닌 뒤 책상 위에 내동댕이쳤다"고 밝혔다.

박씨의 폭행은 집에 귀가한 아들의 코에 상처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A군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날 A군이 친구와 함께 장난감을 두고 싸우자 교육차원에서 코를 잡았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부경찰은 29일 학교 후배들을 각 목으로 폭행한 김모(17)군 등 고등학생 8명을 집단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께 고등학교 도양을 전망대 휴게소에서 중학교 동문 후배 신모(16)군 등 12명을 1시간여 동안 각 목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군 등이 자신들과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

"군기 빠졌다" 각목 폭행

고흥경찰, 후배들 때린 고교생 8명 검거

고흥경찰은 29일 학교 후배들을 각 목으로 폭행한 김모(17)군 등 고등학생 8명을 집단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께 고등학교 도양을 전망대 휴게소에서 중학교 동문 후배 신모(16)군 등 12명을 1시간여 동안 각 목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군 등이 자신들과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

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기를 잡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을 당한 신군 등은 이에 금이 가고 전자 3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 8명 중 김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동부취재본부=주기종기자 gjju@

경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

답신으로 피해신고 받아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학생과 직접 연락,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초중고교와 협조해 전교생에게 문자를 보내 답신으로 피해신고를 받는 실태조사를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하라 는 지침을 전국 경찰에 최근 하달했다.

학교 측이 경찰과 협의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라

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해당 경찰서 학교 폭력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일부 지역 경찰서가 이 같은 방식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태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보고 이를 모범사례로 전국 지방청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신고를 받더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조사에 아예 쓰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선행합격자가 말한다!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3급 공무원 시험 [최강집]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한빛고시학원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모 7급 경찰직 소방직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개강: 2월 1일